

‘KREI리포터’ 경기지회 간담회 결과

1. 개 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일 시: 2018년 4월 11일(수) 11:30~15:00
- 장 소: 당너머한우(경기 양평군)
- 참 석: 총 14명
 - 경기지회 리포터(11명): 김경태, 김만기, 김용덕, 염하나, 유정임, 이기숙, 이현복, 임광혁, 임충빈, 장문호, 조남상
 - 연구원 관계자(3명): 박혜진 선임주무원, 김미리 주무원, 이청은 위촉연구조원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30~13:00	집결 및 점심식사	당너머한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당너머길 29)
13:00~14:30	간담회	
14:30~15:00	당너머한우 견학	

2. 주요 논의 내용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현장여론 수렴
 - 유정임: 배추를 노지계약하거나 납품계약을 받아 김치를 제조하는 사용자입장에서 PLS제도는 아주 긍정적이다. 종종 김장용 배추를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 농약 냄새가 많아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계약재배용 상품이니 만큼 농약검사제도가 철저히 이루어져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기를 희망한다.
 - 김만기: 양평은 한강수계 오염방지를 위한 수계지원비를 통해 친환경 농업만을 경작하는 국내최초친환경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PLS제도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무농약, GAP)에 작물별 세분화된 지침 등을 보완하는 교육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인증에 관계없이 농사짓는 농업인들(고령농업인)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 교육에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홍보교육이 읍면단위 집체교육이 진행되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을 위하여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추가 교육이 이루어지면 PLS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김용덕: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인이 전체농업인에 비해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다. 문제는 관행농지에는 잔류농약이 여전히 집적되어 있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과연 후년에 시행하는 PLS제도에 맞지 않는 농산물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다. 이는 반드시 토양개량이 조치되어야 할 선행과제이다. 충분히 관행농지를 개량한 후 PLS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잔류농약과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된다.
- 이현복: 김용덕 회원 말씀처럼 토양개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미생물을 활성화해야만 가능하다. 이는 고품질의 유기질퇴비를 투입해야 하나 현행 유통되는 유기퇴비라 하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일반 퇴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양의 미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미생물의 균체증식을 위해서는 고품질유기퇴비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농업의 경우 농산물의 오직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 과학화, 전업화 등 획일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결국 대량화에 성공했지만 건강한 식품으로서 생산은 어려워 졌다. 이는 소비자에 건강한 농산물은 감소하고 자연은 파괴화가 심화하고 미래우리의 농업은 생산중심에서 농작물 중심으로 생산가능한 농업을 실현해야 건강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도록 양심 있는 농업이 필요하고 이런 과도기적 시기에 건강보험에 지급되는 보험료 일부를 철학 있는 농업인에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질병에 대해 예방적 치료 실행한다면 질병으로 생성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장문호: 가평은 임야가 84%, 강 6%, 농지가 10%에 불과하지만 한강수계지원비로 퇴비를 지원받는다. 가평의 경우 친환경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이 상품성이 떨어져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반증인 것이다. 결국 이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말한 농지개량을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휴경을 허용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가평의 특산물인 잣의 경우 현대에 도래해서 온난화현상이 심화되어 잣나무에도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농약을 살포할 수 없어 잣나무에 구멍을 뚫어 농약을 투입하는 시험주등에서 잣이 생산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일반 잣과 섞여 불법 유통될 수 있는 문제가 높아져서 가평 잣 유통에 걱정이 우려된다.
- 임광혁: PLS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등록이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보호제(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작물보호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등록된 작물보호제만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산지에서 폐기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매우 엄격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방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 역시 이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 수입 농산물의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PLS 시행에 앞서 많은 농업인들의 우려가 있었다. 잔류농약에 대한 식품안전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적합 판정률이 높아져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가 없어 병해충 방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인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PLS 교육은 농촌진흥청 중심이지만 실제 지역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농기센터에서 품목별로 재배농

업인들을 모아 직접 혹은 초청 강사를 통해 PLS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김만기 회원 말씀처럼 소외된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소단위 교육(마을단위 집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 김경태: 의약품 구매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듯이 농약판매처에서 적용 작물에 대한 해당 처방을 받고, 처방 농약에 대한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 모든 농업인들이 수많은 약제 선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십, 수백 명을 교육하기보다는 농약을 취급 판매하는 몇몇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농업인들은 농약을 구입하는 절차에 대한 교육으로 PLS에 대응하고, 판매처에서는 처방전을 통하여 정확한 농약 판매절차를 지킬 수 있다면 큰 문제없이 PLS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염하나: 특용작물들은 해당되는 농약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전혀 연구대상도 못 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작목별로 정확한 잔류농약수치도 안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되지도 않은 농산물이 많은데 그런 특용작물들에 대해 등록비용등이 발생하여 그것이 농민에게 부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 임충빈: 새해 영농교육장에서 많이 보고 들은 얘기다. 이미 2016. 12. 31부터 시행하고 있고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2차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을 2018. 12. 31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 시행) 되면 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 되는데 교육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농업인은 물론 특히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해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2018년 4월 5~7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문제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먹거

리 지키기와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정부(식약처와 관세청)에서 철저한 검역과 통관을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수입을 더 철저하고 까다롭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도의 완비보다는 시행의 철저를 기하여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

○ 경기지역 농업이슈 및 현장여론 수렴

- 이기숙: 저는 조선3대명주인 감홍로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감홍로주의 주 재료인 찹쌀과 메조(메좁쌀30%)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강원도 영월에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하고 있다. 그러나 도정 상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메조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어 메조를 도정공장(방앗간)도 사라지고 있다. 결국 이는 편리성을 위해 중국산메조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내 메조의 종이 사양되게 될 것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산메조생산을 장려하여 국산메조생산 증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김만기: 양평군에는 농업직공무원이 약 4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특구에 걸 맞는 농업직공무원이 최소 80명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행정직 공무원이 농업분야를 담당하여 업무의 이해도 부족 등으로 원활한 농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 김정태: 1) 요즘 말 산업에 대한 광고방송도 나오고, 주변에 체험 승마장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농촌형승마장이 농업시설인지, 체육시설인지는 잘 구분되지 않는것 같다.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말산업에 대해서도 말 사육에서 승마까지 전 범위를 적용한다면 말 산업이 농업분야가 맞겠지만, 말 사육 보다는 승마장 운영만으로 농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6차산업이 생산, 제조, 서비스를 통하는 것인데 생산 보다는 서비스의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경계선이 필요하다. 2)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유농업'에 대한 농정정보지나 온라인 뉴스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드라마나 생활정보프로그램에 내용을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인근 생산지에서 가능한 공유농업프로그램을 단일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좀 더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업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어촌 거점학교 지정 후 몇 년간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삭감이 되어버렸다. 지원이 되고 있을 때는 주변 초등학교 및 학부모님들에게 학교를 아리꼈다면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자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통학버스 등 많은 것들이 없어졌다. 시내 학교보다 농어촌 학교를 입학 하고자 했던 부모와 예비 신입생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원(교육 지원 및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조남상: 1) 저는 임산물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농지는 300평 이상이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데 임야는 수십만평경작을 통해 임산물 소득을 하여도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앞으로 농지는 줄어들어도 귀산촌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정부에서도 잘 판단하여 앞으로 농약 안 주고 좋은 임산물 생산과 일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김용덕: 1) 농업농촌 아침에 바쁜 시간에 운전연습생들이 도로 주행을 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는 현상은 좋지 않은 일이다. 도로 주행연습을 할 때는 한가한 시간대에 적용하여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운전학원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지도 모르겠다. 2) 요즘 스마트팜 농장을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시대로 탈바꿈하는 시대이다. 경기지역은 농지가격과 시설비를 포함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경기지역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4차산업 시대로 갈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염하나: 1) 겨울이면 이듬해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면적에 따라 이장님께 퇴비, 유박 등을 신청한다. 하지만 제가 그 다음해에 신청

한 유박 및 퇴비가 100%과세로 잡혀있어 면사무소에 찾아가니 이미 되돌릴 수 없고 매년 종종 과세로 잡히는 분들이 나온다면서 직접면사무소에 신청한다고 한다. 귀농인이자 청년농부로서 이장님께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결국 과세로 납부했다. 모든 사업 신청기간도 이장님께만 내려온다는 것이고 다른 모든 소식들이 이장님께서 소식을 전파하지 않으면 틈 날 때 마다 면사무소에 들러 봐야 하는 애로가 많다. 농업에 종사한지 얼마 안되는 입장에서 이런 제도가 참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2) 경기도 지자체 관련 정부지원사업의 오픈공개 모집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경우 매년 일정이 촉박하게 모집하고 있어 농가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어렵고 아는 사람들만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되니 전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공지하는 건 어떨까 싶다. 저의 경우 1월에 저온저장고 사업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고 규모가 작아 어렵다고 한다. 규모가 큰 농가만이 지원사업을 계속 받게 되고 소농들은 계속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 3) 육묘업체등록제에 대해 소규모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육묘업자들은 모두 불법이 될 처지이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계에 맞지 않다.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시설을 무리해서 강요하는 게 아닌가싶다. 실제로 작년에 늦은 봄, 휴경지가 있어 멧돌호박모종을 5일장에 가서 사다 심었는데 다른 호박이 나왔다. 불량묘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제를 실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평수제한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질적인 부담은 철저한 관리에 유통될 수 있게 하고 시설 및 규모에 대해선 완화되었으면 한다.

- 임충빈: 1) 경기도 남부지역에는 예년에 비해 겨울의 강수량이 적어서 '논물가두기'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봄비가 오면 한 방울이라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가두어서 저수량을 늘리고자 하는데 효과나 실적은 미미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물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다. 올해는 가뭄

이 없기를 바라는 농심(農心)이다. 2)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사업 등을 조기에 홍보, 안내하여 주길 바란다. 2018년 농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4월 10일에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미 3개월이 지나서 이런 제도와 정책을 설명(농식품부 식품산업 관련 사무관 2명)하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은 일이라며 앞으로는 연초나 아니면 전년도(예산이 국회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에 하여야 수요자는 새해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많은 참석자가 의견을 나누었다. 3) 농업인에게 정부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정부 지원사업은 대부분 40~50%가 자부담으로 창업이나 시설 설치 및 증설이 쉽지 않아 투자하려고 해도 부담이 너무 크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현장에서는 이런 걸림돌이 있어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정부 농식품 분야 지원사업의 용자에서 금리가 너무 높다. 창업, 시설설치 내지 증설 따위에는 거액이 소요되므로 현재의 금리는 너무 높아서 신규 투자가 쉽지 않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농협은행의 고정금리는 2.5%(농업경영체), 3.0%(종합 등 일반업체)이고 변동금리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농협은 1%~1.5% 이자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농업인 소득 5,000만원 올리자고 외치는 농협이 농업인에게 과중한 이자를 받고 있다. 기준 금리에서 최소한의 수수료나 이득을 취해야 농협의 설립 추지에도 맞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고 이차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다.

○ 경기지회 간담회 계획 논의

- 2018년 하반기 모임은 경기도 가평 장문호 회원 농가에서 개최 예정

※ 가능하면 1박2일 단합대회 형식으로 개최 희망

3. 이모저모

